

# 태봉마을 역사 가치 보존 위해 지자체 관심 가져야

5·18 44주년 - 태봉마을의 비극

## <5·끝> 후속과제

CCTV 한대뿐...우범지대 가속화  
“구청 오월정신 계승 의지 의심”  
민선 8기 들어 한번도 방문 안해  
임택 청장 “주민동의 필요해”

1980년 5월 당시 지역방위군을 편성해 계엄군에 저항한 민중항쟁의 주역인 광주 동구 태봉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봉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동구청이 잊혀진 태봉마을의 오월 역사를 조명하고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광주 동구 태봉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임모씨는 “주민들도 주남마을처럼 오월마을로 조성되고 잘 가꿔지길 바란다”며 “원주민들은 많이 떠났어도 대부분 주민들이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월마을 조성 반대는 일부만 두명이 했다. 그 사람들이 주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일부 사람들의 의견 일뿐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봉마을에서 오월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보존하는 동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구는 지난 2019년 태봉마을을 단 한 차례만 방문했을 뿐 지금까지도 마을 보존 작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시각이다.

마을 주민 김길태(61)씨는 “구청에서



2016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돼 마을어귀에 오월 이야기를 알리는 이정표가 설치돼 있지만 세월이 흘러 글씨가 갈라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는 마을 주민이 반대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주민 전체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주남마을을 보면서 주민들도 반성을 많이 한다. 광주 사람으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이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말처럼 구청의 마을 방문은 일회성에 그쳤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시절 태봉마을을 둘러보고 공·폐가 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을 점검했다.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민원을 듣고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당시 임청장은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청장은 민선 8기가 되고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로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주민과 만남은 없었고, 마을은 점점 잊혀져 갔다.

무관심은 마을 주거환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마을 입구는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좁았으며 CCTV도 마을 입구에 한대만 설치돼 안전 우려까지 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은 최대 격전지이자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지역방위군 역할을 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게했다.

특히 일부 구역에는 도시가스조차 안 들어왔다. 해양에너지동북지사에 따르면 태봉마을 입구부터 경로당까지는 도시가스가 설치됐으나, 경로당부터 태봉산까지 주거지역에는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가 무산됐다.

예산 문제와 주민반대라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비사업 등은 땅과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도 마을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문제도 동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5·18 마을이 되면 어떻게 도시가 발전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다. 동네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오월마을 조성이 마을 발전에 저해한다”는 김모씨처럼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오월정신계승이 반번히 무산됐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입장이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구의회는 태봉마을을 주남마을처럼 조성하고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의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남마을은 5·18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5월이면 기억이 나니 축제를 한다. 마을 진입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도움을 줬다”며 “배고픈 다리에서 주남마을과 태봉마을, 시내를 잇는 5·

18 사적지 코스도 만들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9년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5·18 당시 상황을 기록할 계획을 세웠다. 5·18 사적지로서의 역사적인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기념행사도 열고 싶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역사 문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행정이 원한다고 무조건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구청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재생 방향을 주민들한테 밝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 “매년 초파일이 기일”... 윤재식 열사 부인 배용희씨 참배

“식량 구해오겠다” 나간 뒤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피격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살아 있었을까. 내가 죄지은 것 같다” 생각했어.”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고(故) 윤재식 열사의 부인 배용희(73)씨와 그의 가족들이 기일을 맞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1980년 5월 당시 식료품업체를 운영하던 윤 열사는 21일 도청 앞에서 시위하던 중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목숨을 잃었다.

윤 열사는 21일 오전 “사태가 길어질 것 같으니 비축할 식량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배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 했고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걸 마지막으로 봤다. 위험하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배씨는 광주 내에 위치한 모든 종합 병원에 전화했다. 당시 적십자병원에서 “환자가 많으니 와서 확인하라”라는 말을 전해들은 배씨는 남편이 부상으로 입원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친정아버지와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향했



고(故) 윤재식 열사의 부인 배용희(73)씨가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다. 배씨는 “시민군 지프차를 타고 적십자병원 앞에서 내렸다. 병원 앞 광장에 사망자 명단(인상착의)이 있었다”며 “남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이어 “친정아버지 혼자 병원 영안실에 들어갔다 돌아와 ‘네 인생 이제 망했다’며 화를 냈다. 발이 안 떨어져 끌려 들어가 확인하니 남편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에 총을 맞았는데, 머리가 크게 함몰돼 있었다. 총을 맞고도 계엄군에 폭행당한 듯했다. 시신을 들어 올리니 피가 알락 쏟아졌다”고 말했다.

배씨는 남편의 시신을 도청으로 옮겼다 다시 상무관으로 옮겼다. 그는 “우리는 그 래도 남편 시신을 빨리 찾아 신경 써서 돌볼 수 없었다. 옷에 피가 많이 묻어, 매일 남편이 좋아했던 옷으로 갈아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군의관이 시체 검안을 한다고 찾아왔다. 이후 시신을 안장한다고 하더니 상무관 일대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목발을 짚고 있던 시숙과 함께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 때 상무관에서 시신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다. 지금 행복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씨는 도저히 광주에 있을 수 없어 1981년 서울로 떠났다가 1984년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미행과 감시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깨끗하게 살았다”며 “젊은 사람들도 5·18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

## 국민 21% “5·18 우선 과제는 조사위 보고서 보완 조치”

5·18기념재단 5·18 인식조사 실시  
국민 4명 중 1명 조사위 활동 인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민들이 5·18 우선 과제로 ‘조사위 보고서 입법 보완 조치’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5·18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5.1%가 지난 4년간 조사위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56.6%가 ‘조사위가 5·18 진상규명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들은 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해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5·18 관련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1%가 ‘조사위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 관련 입법 보완 등 조치’를 꼽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살책임자 처벌 18.7% △5·18민주유공자 관련 배·보상 12.7%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12.5% △5·18특

별법 시행 및 개정(왜곡 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5·18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5·18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5·18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지난해 73.5점 대비 0.6점 줄었다.

5·18 국민인식지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지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2.1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67.5점으로 가장 낮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응답 빈도 간 소폭 차이가 있을 뿐 유력한 한두 개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 시민들은 5·18 문제 전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6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위는 암매장·발포명령자 등 핵심과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군경피해 관련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조사내용을 개별조사보고서에 담아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강주비 기자**